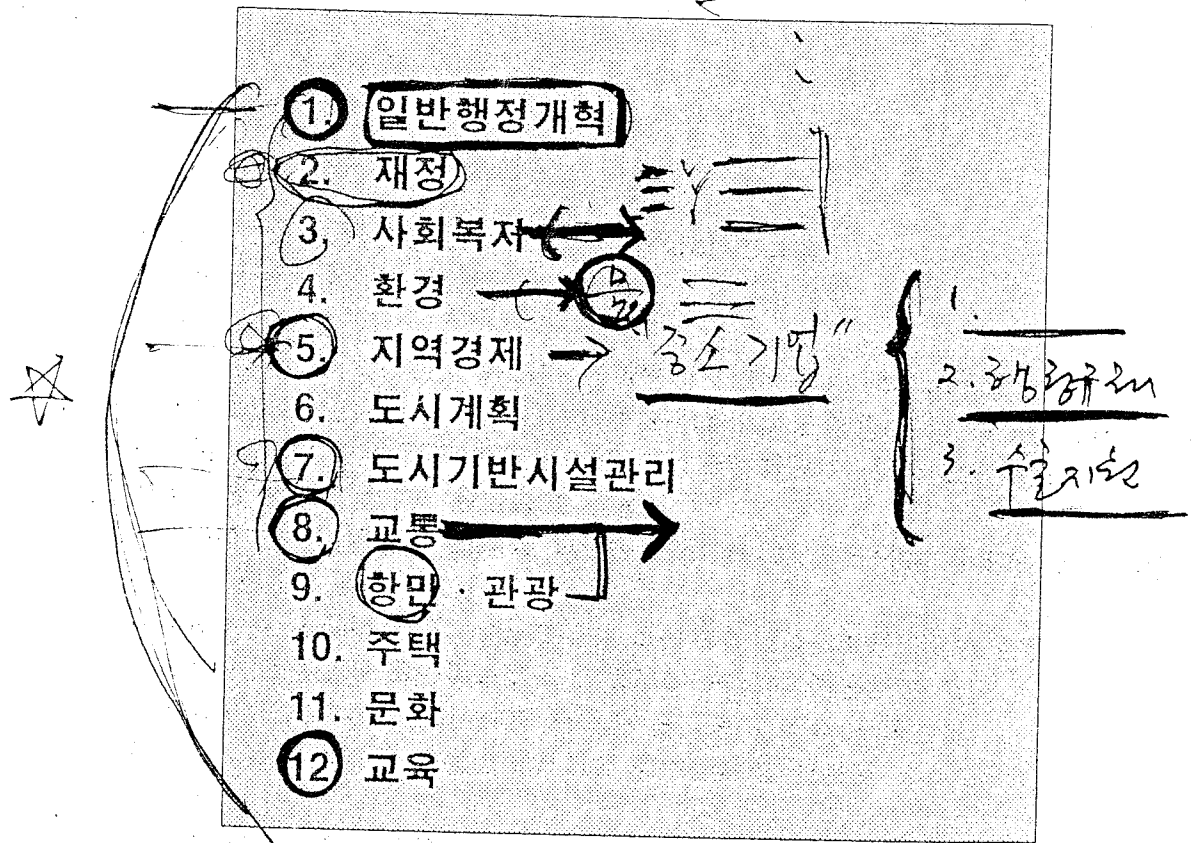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정 12대 부문 공약

남양호

1.
2.



1. 일반행정개혁

1.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부산시의 위상정립

- 1) 부산시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 2)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의 관계정립
- 3)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정립

2. 행정조직 및 운영의 효율적 쇄신

- 1) 정조직의 효율적 개편
- 2)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시민참여행정의 제도화

- 1) 행정절차의 제도화
- 2) 정보공개제도의 제도화
- 3)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의 도입

1.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부산시의 위상정립

1) 부산시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 0 국가사무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부분을 부산시의 자체사무로 대폭 이양
(현재 우리나라 자치사무의 비중은 20%수준, 미국독일은 40- 50%수준)
-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청의 원칙적 폐지
 - 자치적 종합행정이 가능하게 해야 함(예: 부산지방해운항만청)

2)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의 관계정립

① 현행법제도하에서 시장과 시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의 방향

0 사전적인 협의

- 시장이 중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스스로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도록 동기를 부여

0 시장과 시의원의 협조관계 유지

- 시장은 시의원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경청하고 수용
- 시의원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과 필요한 시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세 필요

② 제도적인 개선방안

0 지방시의회의 의결사항 범위확대

- 지방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법률이나 명령로 정한 사항으로 규정
-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 많음

예: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시의회는 의견제시만 가능

-> 지방시의회의 의결권을 확대할 필요

0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의 정보권 확대

- 사무처 인사권은 의회의장이 행사하여 사무처 전속요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함.(현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 따라서 대부분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

0 시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도화

- 시장은 모든 중요 결정사항과 사무처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조사권의 발동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

0 행정조사기능의 강화

- 특정한 사항에 대해 시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시의원 1/5이상으로 완화

0 독립된 회계감사기관의 설치

- 시의회 예결산심사나 시산하 감사실의 기능이 불충분한 것을 감안하여 시의 재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부산시 회계감사기관의 설치가 필요
- 감사기관의 구성은 시의회가 하도록 하여시의회 기관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

3)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정립

① 현행법제도하에서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정립의 방향

0 부산시와 자치구간의 협력증대

-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이나 시의회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참여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이 점에서 시행정은 구행정과 단절되어 구나 구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장은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예: 구청장 면담, 구의회 출석 등을 정례화)

0 부산시의 정책결정기능과 자치구의 집행기능의 증대

- 본청에서는 기획업무와 감독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이에 맞도록 기구를 집행기구를 대폭 축소
- 자치구의 집행업무를 위한 권한과 인력을 보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권화를 실현

0 자치구간의 협력증대와 부산시의 조정기능 강화

- 자치구간의 업무중복, 이해관계의 차이 발생시 행정의 효율성 저하나 갈등관계 초래
- 부산시의 합리적 조정역할 중요

② 제도적 개선방안

0 자치구의 올바른 위상정립 및 부산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 구의 위상을 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하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 구청장은 자치적인 인사권과 조직권을 갖고 시의 집행기능을 수행
- 구의회는 구의 자치사무와 시의 위임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집행에 대해 시의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과 행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짐. 조례제정권은 없음.
- 이상과 같이 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경우에 감소하는 구의 자치권은 구의 시 행정에 대한 참여권의 확대로 보충
- 구청장이 파견하는 구대표자회의가 시의회의의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례의 제안권과 의안의 발의권을 갖고 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

0 부산시와 구간의 합리적 업무배분

- 부산시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구로 이전하여 구가 실질적인 부산시의 행정집행기관이 되도록 함
- 부산시는 중요정책의 입안과 결정기능 및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 전체적 통일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함.

2. 행정조직 및 운영의 효율적 쇄신

1) 정조직의 효율적 개편

① 자치조직권의 확보

0 현행 자치조직권은 지나치게 협소

- 지방자치법 제 102조 1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그러나 권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 국·실은 물론 과조직도 마음대로 조정이 안됨.
- 따라서 능동적 자치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그 자체가 불가능

0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지 정치력의 발휘를 통해 조직개편에 필요한 자치조직권 확보가 필요함

②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의 개편

0 새로운 행정관에 입각해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하

거나 불합리한 기구 및 부서를 대폭적으로 폐지 내지는 축소

0 동사무소의 개편

- 동사무소의 주된 업무는 민원업무 중에서도 주민등록의 발급이나 전입신고 등 증명민원 및 단순민원 불과
- 행정전산화의 확대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사무소가 별도의 행정계층을 이루면서 30명 가까운 인력과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

0 동사무소를 폐지하거나 그 조직을 대폭 축소할 필요

- 주민과의 근접성 요구되지 않는 기능은 구청에서 직접수행
- 주민과의 근접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우체국, 파출소에 소수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시중은행의 협력을 얻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0 각 중사업소의 민영화

- 공공성도 사업성도 살리지 못하여 설립목적 상실한 사업소는 정비해야 함
- 예를 들면 부산시립의료원은 시중 일반 병원과의 차별성도 없이 운영상의 부담만 가중

③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의 강화·신설

- 자치시대의 독자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직의 확대
-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 관련 조직의 강화(예: 국제통상협력실)
- 산업경제지원부서의 확대
- 광역적협력을 위한 지원부서강화 등

2)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① 정책실명제의 도입

- 0 중요 정책에 대해 최초기안자, 결정참여자, 정책집행자 등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함.
- 0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가급적 현직무를 유지토록 함.
- 0 정책에 치명적 결함이 있을 때는 변상책임, 국민소환등의 대상이 되게 하고, 성공적일때는 평점에 가점을 주도록함.

② 고객 지향적 쇄신행정

0 현업부서의 기능확대

-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간접인원을 대폭줄이고 이 여력을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현업부서로 돌림

- 이를 위해 현입부서 공직자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증가시키는 현입부서 기능확대책이 필요(주인의식, 창의력, 동기부여 등)

0 시행정쇄신 및 서비스 개선위원회

- 행정관료와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부산시의 능률낭비요소를 찾아내 제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층적인 입무진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가칭 '부산시 행정쇄신 및 서비스 개선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쇄신힬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③ 개방형 고용제도입

- 0 현재 부산시의 고용제도는 총무처의 근무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게 매우 경직적.
- 0 공무원 신분을 다양화해서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급여(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를 지불하는 공무원들을 충원
 - 공무원 사회의 정채,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인건비도 절약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제계약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3. 시민참여행정의 제도화

1) 행정절차의 제도화

- 0 따라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일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일반행정절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0 즉 부산시행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의 모델을 개발하여 시민의 참여와 절차를 통한 합의도출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0 특히 대다수 시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수행이나 혐오시설 또는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확정절차 등의 분야는 행정절차조례제정이 시급히 요구됨.
 - 즉 계획확정에 관한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인 '확정-공표-방어'의 모형이 이제 '참여-협상-보상'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모델에 따른 서울중랑구의 '주민 입지선정위원회제도'나 전북 남원시의 '시민법정제도'(중앙일보 95. 2. 6 참조)

2) 정보공개외 제도화

- 0 수동적 공개에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체계 수립이 필요

0 시민과 행정간에 의사수렴의 매개 요소(예: 정보공개옴부즈만, 교통·환경네트워크 등)를 개입시켜 의사의 교환을 활성화.

0 정보공개절차의 간소화

3)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의 도입

① 감사 및 조사청구제도의 도입

- 일정수 이상의 시민연서로 시민발의에 의한 행정조사 및 감사청구제도 도입

② 시민발의제도

- 일정수 이상의 시민연서에 의한 특정한 조례의 개폐 요구

③ 시민소환제도

- 일정수 이상의 시민연서로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해산을 청구하여 의회동의나 국민투표로 결정.

④ 소위원회의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의무화

- 의회의 실질적 운영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과정을 거쳐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결정됨.

- 그러나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음.

- 따라서 부패와 결탁한 소지가 큼

⑤ 공청회의 적극 활용

- 주민들의 반론과 문제점 적극 수용

2. 재정

1. 예산편성 및 관리의 합리화

- ① 경직성 경비 최소화(관변단체, 경찰청, 교육청)
- ② 예결산의 신문공고
- ③ 예산지출의 올바른 우선순위 확립
- ④ 예산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2. 징세행정의 효율화

- ① 부산시 본청 및 구 전체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기관설립, 구세는 부과징수 후 구에 배분
- ② 토지시가표준의 설정의 자의성 배제, 세무부조리 방지, 부과 징수의 전문화 및 규모의 경제달성

3.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방향

-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조정(주세, 전화세의 지방세 이관)
- 지출적인 예산편성 인정(지침의 폐지)
- 지방채발행의 내무부 승인제도 폐지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하고 산정방식을 변경
- 보통교부세가 부산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함.
- 토지관련세금의 과세표준 확대 및 세율의 인하
- 지방세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 항만관련수입의 50%이상을 부산시로 이관

3. 사회복지

I. 사회복지일반

1. 일반회계 20%수준까지 사회복지 재정의 증액
2. 사회복지기금전달체계 및 행정의 간소화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

II. 생활보호대상자

1. 영세민 생활자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확대
2.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 확대
3. 영세민 취업대상확대를 위한 인턴사원제 도입

III. 노인복지

1. 노인취업을 전담할 시립노인취업알선소 마련
2.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확대

IV 장애인 복지

1. 장애인발생예방에 주력
2.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3. 공공시설 매점분양시 장애인 우선분양

V. 아동, 청소년, 부녀 복지

1. 아동보호구역지정 확대 및 상시경찰관 배치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통제강화
3.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4. 여성전용 직업훈련원 개설

VI.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건위생정책 마련

1. 상수도수 불소 투여사업 실시
2. 공공의료 부문강화

3. 사회복지부문

I. 사회복지일반

1. 일반회계 20%수준까지 사회복지 재정의 증액

임기중 현재 13.5%인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를 20%까지 확충시켜 21세기에 걸맞는 삶의 질을 보장.

2. 사회복지기금전달체계 및 행정의 간소화

(1) 사회복지기금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 반장의 확인으로 지정 및 복지재정의 전달이 되도록함.

(행정절차 간소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는 각 자치구가 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 하므로 부산시가 각 자치구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을 완화함.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부공무원중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을 양성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으로 양성함.

II. 생활보호대상자

1. 영세민 생활자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확대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정도에 지나지 않는 생활보호자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향상시킴.

2.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 확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아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선할당후분배' 방식 때문에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의 주민들을 위해 전국평균인 4.3%까지 확대지정하여 보호받아야 할 계층을 보호한다.

3. 영세민 취업대상확대를 위한 인턴사원제 도입

영세민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체의 인턴사원제를 활용

III. 노인복지

1. 노인취업을 전담할 시립노인취업알선소 마련

(1) 시립노인전용 취업알선소를 건립하여 노인취업을 전담케 함.

(2)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노인들이 산업체로 가지않고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여가와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

2.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확대

(1)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을 확충하여 입주해야 할 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

개 함.

- (2) 경로당을 확충시 지역적분포를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경로당이 위치할 수 있게 함.
- (3) 경로당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증액함. 월 50,000을 월 100,000으로 증액함.

IV 장애인 복지

1. 장애인발생예방에 주력

출생시 장애를 줄이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산모의 대사이상 검사시 전액지원

2.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1) 장애인의 재활상담과 문화체육시설을 겸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건의 심의할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 (3)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 (4) 장애아 진단평가 기관 설치
- (5) 장애인 종합복지관 각 구별 1개소씩 설치

3. 공공시설 매점분양시 장애인 우선분양

공공시설매점 분양시 장애인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제정

V. 아동, 청소년, 부녀 복지

1. 아동보호구역지정 확대 및 상시경찰관 배치

- (1)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새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
- (2) 여성경찰관을 상시배치하여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업무 부여함.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통제강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과 불건전한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함.

3.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하여 절대 빈곤층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최저 수준의 보육수요를 해결
- (2) 민간 보육시설의 준공공화로 보육의 질적향상 제고

4. 여성전용 직업훈련원 개설

- (1) 여성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를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과 장기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을 설치한다.
- (2) 직업훈련원의 경우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 직업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VI.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건위생정책 마련

1. 상수도수 불소 투여사업 실시

5개정수장에 분소를 투입하여 부산시민들의 충치예방효과를 극대화 함.

2. 공공의료 부문강화

(1) 저소득층, 인구밀집지역 중심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를 증설한다.

(2) 공공의료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의료원의 만성적자를 경영합리화로 개선하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들을 위한 진료분담을 담당케 하는데 지원한다.

4. 환경

부산시 환경행정의 개선방향

- 0 부산시 종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한다.
- 0 부산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 0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투자를 증가한다.
- 0 환경행정의 조직 개편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세부정책

- 0 「금호강유역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4개도시 관민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0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은 상시 개방하고 하구언의 일부 토인재(댐)는 교량역할만 하도록 바꾼다.
- 0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부산의 수질특성에 맞는 정수장의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며 부영양화의 요인인 질소, 인 제거시설을 도입한다.
- 0 오염원배출이 심각한 신평, 장림, 사상공단 등 공장폐수오염원의 차단을 강화한다.
- 0 절수형 도시를 구축한다.
- 0 시민, 환경단체의 적극지원을 위해 부산시에 설치된 환경관련위원회에 시민대표나 환경단체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식적인 감시권을 부여한다.

대기오염

-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기준 초과여부의 정기적인 점검등 운행차량에 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정기검사제를 도입한다.
- 대기오염이 심한 공단지역이나 교통집중지역 등을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고시하여 대기오염 전광판확대, 대기오염경보제 실시, 주민신고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정책방향

- 1) 쓰레기 감량의 최대화와 재활용의 극대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매립이나 소각은 보조축으로 하는 새로운 종합적 쓰레기 처리과정을 확립한다.
- 2) 재활용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 소각,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고도화

환경

부산시 환경행정의 개선방향

- 0 부산시 종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한다.
대기, 수계 등 자연환경체계와 인구, 주택, 교통, 수질, 소음 및 진동 등 환경부하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하여 환경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환경보호 적인 도시를 만들어 간다.
- 0 부산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기준, 지역총량제 실시 등 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0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투자를 증가한다.
지방직공무원 선발시 환경직을 설치,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교육, 훈련과정을 거쳐 담당부서에 고정 배치한다. 연구개발예산을 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증가한다.
- 0 환경행정의 조직 개편
 - 부산시의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개편하여 자연보호업무, 공원, 녹지업무, 도시하수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환경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단일메체 중심의 조직구조인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 등으로 재편성하여야 하며 각단위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환경기획과」를 만들어 환경행정의 일원화가 되도록 한다
 - 부산시와 각 구청간의 환경행정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도 부산시는 종합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각 구청의 환경행정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각 구청의 환경행정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각 구청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시, 구청공무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세부정책

- 0 「금호강유역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4개도시 관민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몇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최대 오염원인 금호강유역을 제도적으로 별도로 규제관리하지 않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하수처리시설 투자계획만 추진하려는 정부

의 땀질식 처방에 대해 시민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확산시킨다.

또한 워친공단 등 신규공단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악성오염원 배출업을 낙동강 유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한다.

0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은 상시 개방하고 하구언의 일부 토인제(댐)는 교량역할만 하도록 바꾼다.

하구언이 교량역할만 담당할 경우 수질개선효과의 시뮬레이션, 하구언 설치의 주요 목적이었던 염분의 침투범위와 피해정도의 예측, 갈수기 수자원의 확보가능량정도, 하구언 제거에 따른 공사비용등을 먼저 파악하고 공개토론회 및 세미나등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하구언 철폐에 따른 여론을 주도한다.

0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부산의 수질특성에 맞는 정수장의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며 부영양화의 요인인 질소, 인 제거시설을 도입한다.

0 오염원배출이 심각한 신명, 장림, 사상공단 등 공장폐수오염원의 차단을 강화한다.

- 효율적인 폐수관리를 위해 폐수실명제를 정착시키고 불법 방출을 대비 인근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이 비상연락망을 조직하여 비상대기출동반을 구성하거나 환경출장소를 신설하도록 한다.

- 영세업체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자금용지를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공업발전기금에서 용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0 절수형 도시를 구축한다.

-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사우나, 목욕탕, 세차장, 공장과 공동주택 등에 중수도설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도록 하며 신, 개축시는 의무화하도록 한다.

- 일반가정에도 절수형수도꼭지 보급, 6리터 절수형 양변기 사용, 권장 등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0 시민, 환경단체의 적극지원을 위해 부산시에 설치된 환경관련위원회에 시민대표나 환경단체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식적인 감시권을 부여한다.

대기오염

-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기준 초과여부의 정기적인 점검등 운행차량에 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정기검사제를 도입한다.

- 대기오염이 심한 공단지역이나 교통집중지역 등을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고시하여 대기오염 전광판 확대, 대기오염경보제 실시, 주민신고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정책방향

쓰레기 감량의 최대화와 재활용의 극대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매립이나 소각은 보조축으로 하는 새로운 종합적 쓰레기 처리과정을 확립한다.

- 청소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쓰레기 발생에서 최종 매립까지 쓰레기관련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1)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0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보다는 거주지역내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품수거함을 다수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봉투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종량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요금은 낮게 차별 적용한다.

0 문전식 수거방식을 실시한다.

0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주민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0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량제 실시를 검토한다.

- 단독주택- 현행 방식을 적용
- 공동주택- 일정숫자의 세대를 하나로 묶어 지역종량제방식 고려(행정비용 감소, 주민 공동의식 고양)
- 청소영역업체 처리 -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격봉투의 색으로 구별한다.

0 호텔, 백화점, 상가 등 대형배출처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를 강화한다.

2) 재활용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 재생산업정책은 경제성이 아니라 환경을 중심에 두고 재생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한다.

0 종합환경단지를 조성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제반 시설을 대규모 단지내에 연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0 현재 해운대구에서 가동중인 「상설 자원 재활용센터」를 각 구에 확대 실시하여 각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도록 제도화 한다.

3) 소각,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고도화

- 소각시설은 고도의 기술개발로 폐열을 이용 전력을 재생산하는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되도록 한다.
현재 건설중인 구단위 소각시설의 확장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산지역을 2-4개의 광역적 쓰레기처리분구로 나누어 각 처리분구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매립장의 확보는 대규모 매립장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하며 매립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 하는 등의 위생적 매립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매립지의 재이용은 인근 주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한다.

5. 지역경제

*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련사업 지원

- 부산국가공단 확장, 가덕도, 용원지역 등의 근접지역에 50만-100만평규모의 '자동차관련부품전용공단'을 조성
- 지사과학산업단지에는 신호·녹산공단의 자동차관련 기계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메카트로닉·항공기 등의 첨단산업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을 강화
- 자동차전시장, 시기구, 금융세계

* 현재 공단 조성 계획중인 녹산 국가공단 및 신호지방공단, 지사동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묶어 하나의 메카트로닉스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촉구하고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 엔고로 인해 해외이전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첨단기술을 소유한 중소기업 유치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거나 개발요건의 완화를 위한 서부산권 특별법 제정 촉구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인구를 억제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정되었지만, 강서지역의 지정은 오히려 부산이라는 기존도시의 자연을 파괴해 버린 결과를 초래함. 즉 산지의 훼손, 환경파괴를 일으켜 부산의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대상의 신용보증기금 설치
- 지방중소기업이 수도권 소재의 기업에 비하여 불리함이 없는 무역지원행정체제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촉구.

* 부산시 금융산업에 대하여

- 지역은행의 시금고 업무 및 지방공공기관 산하단체의 금고업무 전담.
- 중앙부처의 허가, 승인, 감독, 보고사항에 관련된 업무 이양

* 유통구조의 현대화

-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부전시장등 도심재래시장은 전문도매상가로 육성
- 이를 통해 점포의 집산화 및 재배치를 추진, 시설과 환경을 공동 개조해 공동 구매 공동보관 공동정보조사를 함으로써 독과점업체 대형소매기관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

7. 도시기반시설관리

- 기반시설 성능 종합평가제도 도입

도시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을 이용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시설 성능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제도 및 사후 평가제도 도입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은 계획단계에서 시설물 인근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시설물 이용실태 조사분석제도 도입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용현황이 정기적으로 작성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시설물 이용실태 조사분석제도'를 도입한다.

- 시민재난경고시스템 도입

주요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경고와 홍보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재난 경고시스템'을 확립한다.

- 시설물 종합정보망 구축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반 기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설물 종합정보망'을 구청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도시시설물 시민신고센터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인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도시시설물 시민신고센터'를 설치한다.

-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보고서의 사후 비교, 분석제도 도입

주요시설물에 대해 공사전에 시행하는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후에 반드시 비교·분석하여 평가결과를 수정·보완하고 구조물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산시에 산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산시안전관리본부를 설치.

8. 교통

부산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 중앙로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구조를 조정하여 중앙로 노선과 지선노선으로 이원화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시스템의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고 다인성차량에 대한 전용차선제로 확대실시한다.
 - 시내버스의 고급화, 냉방시설확대, 심야운행실시, 할인제 도입 등 시내버스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한다.
-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 10부제운행, 승용차 합께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녹색교통(Green traffic)시민운동」 참여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및 터널 통행료 전면 면제 자동차보험료 10% 할인 및 역세권 주차장 정액주차권 우선발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 도심내 위치하여 심각한 교통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제충유발시설의 시외곽 이전을 추진한다.
 - 대규모 교통유발을 가져올 경부고속전철역사를 현재의 부산역, 부전역에서 부산 광역권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강서구 등지로의 이전을 재검토 한다.
-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하여 지하차도, 고가교 등의 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
 - 기존 교통신호체계를 새로운 신호체계로 정비하며 첨단신호기기를 도입한다.
 - 일방통행제의 확대, 가변차선제의 확대 등 TSM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교통행정을 전문화, 일원화 시킨다.
 - 교통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간의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관리기구를 설치한다.
 - 부산시 및 각 구청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여 교통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 신속한 교통정보의 제공 및 교통교양 등을 위한 「교통방송국」을 설립을 추진한다.
- 간선도로망 및 지하철 건설을 확충하고 도로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 지하철 2호선의 조속한 완공과 3호선의 조기 착공
 - 기 계획되어 있는 지하철, 도시철도 및 항만배후도로, 해안순환도로, 지역간 연결터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다.
 - 간선도로망 확충과 지하철 건설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열쇠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달려있다. 부산권의 도로망 확충은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이자 국토동남경제권의 중핵도시로 육성할 것인가의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국가적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실현한다.

- 시민의 이익이 우선하는 민자유치를 적극 실현하되 구덕터널과 같이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민자유치는 지양한다.

□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심각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를 위해 사람위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설치체계를 개선한다.
-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학교주위의 어린이보호구역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교통경찰을 상주시킨다.
- 장애인의 보행 및 승차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9. 항만. 관광

부산항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 경쟁력 있는 부산항, 부산시민의 부산항 건설

1) 항만시설 및 관련시설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대대적 확충을 실현한다.

- 부산북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가덕도 신항만의 조속한 건설
- 현재 건설중인 양산 ICD의 조속한 완공과 ODCY의 이전을 통하여 부산시의 교통난,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계획중에 있는 항만배후도로건설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7개의 항만배후도로, 사업비 94년 투자비 2,300억원중 시비 1,580억원, 국비 250억원, 민자유치 200억으로 시비의 부담이 절대적임

부족한 부산항의 시설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8부두와 미 55보급창의 조속한 반환의 실현

- 이를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한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산항의 관리·운영에 부산시의 참여가 실현되어야 한다.

부산시장 직속의 공무원, 항만전문가, 항만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설치한다.

항만운영체제의 혁신을 위하여 국가, 부산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항만관리공단의 신설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하여 항만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어항법 등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항만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이를 위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시민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임항내 시민친수공간(해양공원)을 마련한다.

- 동삼동 매립부지내 「해양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한다.

관광정책에 대하여

- 전문이벤트 사업자 육성 및 지원.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대비하여 관련 스포츠 및 이벤트 시설 필요함. 특히 부산지역은 스포츠 관련 전문 이벤트 사업자가 거의 없음. 아시안게임이 부산시민이 주체인 축제가 되고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이벤트 사업자 육성 및 지원이 요구됨.

- 부산관광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해운대 관광특구의 기능을 강화.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국제영화제, 가요제, 학술대회 등 국제적 이벤트를 발굴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 가야 유원지의 발굴과 금정산성유원지, 민속촌 개발

1301-1302 1672

김해 등지의 가야유적지를 적극 발굴하여 역사적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영강선착장 인근의 하구언 상부를 시점으로 맥도강을 거쳐 제2낙동교를 연결하는 낙동강 유람선 운항. 낙동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스포츠·레저시설, 철새를 탐조하는 문화적 관광 등 역사, 문화, 레저가 겸비된 내륙관광의 한 거점으로 육성. 또한 금정산유원지는 역사적 교육의 현장으로서 관광가치가 매우 높은 바, 청소년 교육과 위락기능이 어우러지는 대표적 내륙관광지로 개발하여 가야유적지, 금정산유원지, 낙동강을 연결하여 해양관광과 연계되는 내륙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개발.

- 전통문화관광공상품의 개발을 위해 권번제 부활, 동래학춤, 야류부활, 금정산에 민속촌 조성등을 추진.

10. 주택

* 도개공 개선에 대하여

- 도개공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공공부분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공공부분의 건설(임대주택)물량을 전체의 50%이상까지 시행
- 택지개발시 전면매수, 개발공급 및 사후관리
- 시공성적을 토대로 우수시공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대신 한건이라도 부실경력이 없는 업체는 입찰자격을 처음부터 박탈하는 내부규정마련
- 조성원가이하로 아파트 분양
- 복지아파트 건설공정의 30%이내 근로자 미분양시 일반분양을 건설공정 70%이내 근로자 분양하고 이후 미분양 부분은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
-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
- 대기자 카드 작성(WAITING CARD)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을 체계적으로 개선

* 주택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지원을 확대.

예) 60세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취득자금과 전세금의 대출지원을 확대, 현재의 지원금 3천5백만원과 1천7백만원을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민자당의 지방선거 공약)

* 불량거주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선입주 후철거의 원칙을 지키며, 원거민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순환개발방식 도입을 제도화

11. 문화

1. 공공도서관 현황

0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드높아짐에 따라 문화의 비중을 대폭강화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적인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화예술행정은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가하고 호응할 수 있는 문화의 대중화를 추구한다.

0 지역의 교육, 문화센터 역할을 위한 1區 1 도서관, 1區 1 문화원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금을 촉구한다.

0 지방문화의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주민 등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시안 게임

0. 5월 20-24일(제 14차 서울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개최도시 결정

0 - 아시안게임유치 실무기획단 발족

-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각계 각층의 850여명) - 2000년 전국체육대회 부산개최 결정

1. 아시아 경기대회의 의의

- 내부적으로는 단순한 체육행사만이 아닌 부산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종합적 이벤트

- 대외적으로는 동남권의 중추도시, 국제적거점도시로서의 도약

2. 대회관련시설 확보계획

38개 소요경기장 중 25개 기존시설 활용, 13개 경기장은 1천6백억원을 들여 건립, 선수촌 등 지원시설은 민자유치로 건설 향후 시민들에게 분양

3. 국제도시와 아시안 게임을 위한 정책방향

1) 국제교류기반의 조성

- 외국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과 서비스의 확충

- 국제적 도시정부간에 자매결연 활동으로 상호이해와 협력기회를 확대
 - 시민들의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
- 2)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도시행정기능의 쇄신
 -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업무의 대처방안 마련
 - 3) 고도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국제업무기능의 강화
 - 텔리포트 빌딩 등 첨단정보시설, 부산국제공항과 항만의 확충
 - 4) 외국인 생활의 안전성 편리성 증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영문표지판, 언오소통불편, 위생 및 청결문제 등 국제도시로서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기초적 기반조성
 - 5) 국제화 시대의 상호교류 통로를 다양화 하여 민간외교를 지원할수 있는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숙박은 물론, 전시, 문화행사,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